

은행법 시행령

<목 차>

1. 영업 일부폐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박종혁
	담당부서 (과)	은행과		직급	사무관
	국장	신진창		연락처	02-2100-2952
	과장	강영수		이 메 일	fsc0265@mail.go.kr

2023. 03. 2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 일부폐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마련		
	2.규제조문	제24조의9 제5항		
	3.위임법령	은행법 제43조의4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3.4.10. ~’23.5.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과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업무 폐업시 은행의 영업 일부폐업에 대한 「은행법」상 인가근거가 부재 <input type="checkbox"/> 「은행법」 개정(‘23.3.21. 공포)으로 은행이 영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은행법」상 영업 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자산액, 총이익 기준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으로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은행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업무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보호 등을 검토·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구체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간이형 규제로서 비용편익 분석 대상에 미해당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9(합병 등의 인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4조의9(합병 등의 인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1. 폐업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 폐업하려는 영업부문의 총이익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과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업무 폐업시 은행의 영업 일부폐업에 대한 「은행법」상 인가근거가 부재
- 「은행법」 개정(‘23.3.21. 공포)으로 은행이 영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現 은행법상 영업 양도·양수와 동일하게 은행의 **고유업무 일부** 또는 **겸영업무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 (고유업무) 예금업무 / 대출업무 / 내국환·외국환

○ (겸영업무) 신탁업 /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 투자자문업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진행 예정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은행이 업무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 등을 검토·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구체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자본시장법」(§161 등)상 상장법인이 **영업을 양도·양수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인 “**중요한 일부**”의 기준과 **동일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❶ 미국 : 인가 목적(Charter Purpose)을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은 OC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12 CFR §5.20 (b))

- 인가 목적 변경을 포함하여 ‘자산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OC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12 CFR §5.53 (b))

❷ 일본 : 은행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업무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일본은행법 제30조 및 제37조)

○ 타법사례 - 자본시장법령

「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은행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은 상황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위 및 금감원 심사체계를 통해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로 인한 별도 재정 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2.27일 은행법 개정, '23.9.22일 시행 예정
- '23.4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추진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은행이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불필요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종합결론

- 은행의 규제 준수 의무는 일시적이며, 준수를 위한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규제로 인한 일반국민(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장기적
-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일반국민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